# MB정부 호남 인사 소외 갈수록 심화

## 조영택 의원 장·차관급 80명중 영남 34명·호남 13명

### 靑 선임행정관 이상 영남 47%·호남 13%

이명박 정부의 영남 인사 편중과 호남 인사 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갑)은 24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24일 현재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급 80명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 24명(30.0%)과 부산·경남 10명(12.5%) 등 영남 출신이 34명으로 42.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영남 출신 장·차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08년의 19명(33.3%)에서 2009년 8월에는 24명(41.3%)으로 늘었고 이번에 또다시 늘어나는 등 갈수록 영남 편중인사가 심해 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광주·전남 출신 9명(11.3%)과 전북 출신 4명(5.0%) 등 호남 출신은 13명(16.3%)에 불과했다.

또, 서울지역 출신은 14명(17.5%), 경기 3명(3.8%), 충남 9명(11.3%), 충북 2명(2.5%), 제주 1명(1.3%) 등이었다.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상 고위직 인사의 영남 인사 편중은 더욱 심했다.

이날 현재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상 83명의 고위직 인사 가운데 출신지역이 확인된 53명 중 대구·경북 출신이 17명(32.1%)으로 가장 많고, 서울 출신이 13명(24.5%), 부산·경남 출신이 8명(15.1%)으로 뒤를 이었다. 영남 출신이 25명(47.2%)이나 된 것이다.

반면, 충북 및 전북 출신이 각각 6명(11.3%)이었고, 광주·전남과 강원 출신은 각 1명(1.9%)으로 호남 출신은 모두 7명(13.2%)에 불과했다. 충남과 제주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편중이 도를 넘어섰으며, 지역차별적인 인사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6·2지방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따라 국정을 쇄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거국적 탕평인사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선 5기 이것이 현안이다 광주 광산구

# 軍 비행장 이전 대책 서둘러야

민선 5기를 맞는 광주 광산구는 최근 급격하게 몸집을 불린 성장세만큼이나 현안 또한 매머드급이다.

특히 군 공항이전 등 당면과제 대부분이 자치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어서 단체장의 정치력과 중앙정부의 의지가 현안 해결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다.

### 주민 재산권 제약 '군 사용지' 해결책 시급

### 대규모 택지개발 인구 증가… 도로 개설도

광산구는 광주시 자치구중 가장 넓은 면적(45%)을 관리하는 곳답게 '기피시설'도 2곳이나 들어서 있다.

송정·도산·황룡·신촌·도호동 일대에 걸친 595만㎡의 '군 공항'과 삼도·평동 일원 748필지 641만㎡에 달하는 '군 징발지'가 그곳이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온 시설이지만 문제는 그동안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했고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막아왔다는데 있다.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두 시설에 대한 이전 요구가 거세지자 국방부는 군 공항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 이전 대상지역 지자체간 선(先)협의를 요구하고 있어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낱같은 희망이 엿보이는 군 공항 이전과는 달리 군 징발지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육군 포사격장과 각종 전투 훈련지로 쓰이고 있는 평동·삼도동 일대 군 징발지는 재산권은 물론 불발탄 등으로 주민들의 생존권도 수시로 위협해왔다.

광산구의회가 지난 2007년 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비롯해 광주시민 5만3381명의 서명 전달, 관계 기관 간담회 등 해법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대체 훈련장이 없다는 이유로 청와대와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 기피시설 문제 해결과정에서 단체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산구는 또한 수완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증가세라면 오는 2015년께면 50만명을 보유한 거대 자치구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세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는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50만 인구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공간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의 여가와 건강을 담보할 체육시설과 대규모 시립 도서관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신설도 추진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진로에서 상무로(광주공항 사거리)를 잇는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 이 도로는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지만 '부자 감세'에 따른 정부의 예산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앞으로 신임 단체장이 지역 국회의원 및 주민과 탄탄한 파트너십을 구성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

## 민주, 30일 선출

민주당 광주시의원 당선자들은 오는 30일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의원 당선자들은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의장 후보 토론회를 거친 뒤 투표를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선을 통해 뽑힌 민주당 의장 후보는 제6대 광주시의회 구성원(민주당 20명, 민주노동당 2명, 교육의원 4명)을 감안하면 의장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시된다.

의장 선출 날짜는 오는 7월6일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2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일단 부의장(2명)과 상임위원장(5명) 직책을 맡지 않기로 했다.

현재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로는 3선인 손재홍, 나종천 의원과 재선인 조호권, 진선기 의원 등이 거론되며, 손 의원과 조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25일 후보 등록 의사를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여야 집시법 상정 설전**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상정과 관련, 안경률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상정 충돌 조짐

### 여 "강행추진" 야 "총력저지"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강행 추진하는데 맞서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며 총력 저지를 선언하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24일 세종시 수정안 부의 요구서를 28일 본회의에 제출한다는 방침 아래 이미 부의요구서 제출을 위한 30명 이상의 의원을 확보했고 현재까지 51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는 임동규 의원 주도로 서명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친이 핵심인 안경률, 정두언, 진수희 의원 등이 서명에 동참했다. 친이계는 주말까지 100명 이상의 의원 동의를 확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상임위에서 폐기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는 '오기의 정치'이자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강기정 의원 벌금 500만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형주 판사는 24일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한나라당 간사가 협의 없이 개회한 것이 관행을 어긴 것이라 해도 위법행위는 아니다"면서 "이 때문에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보좌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당명만 빼고 모두 바꿔야"

## 민주 김효석 의원 본격 당권 행보 나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도전하는 김효석 의원이 '뉴 민주당' 건설을 기치로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섰다. 김 의원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6·2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정의하고 "이제 '뉴 민주당 정부' 건설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민주당은 새로운 도전보다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로 갈려 이해득실을 따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당명만 빼고 모두 다 바꿔야 한다는 비장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낡은 리더십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통해 민주당의 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뉴 민주당 플랜을 바탕으로 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봄'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지방정부와 함께 수권정당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뉴 광주 플랜', '뉴 부산 플랜' 등 '뉴 민주당 지역 플랜'을 개발, 적극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는 민주당 만의 잔치가 아닌 국민적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도부 경선 방법으로 단순한 대의원, 당원 투표를 넘어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